

남북대화로 10.4선언의 이행방안 마련해야

박 종 철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10.4정상선언을 채택한지 일 년이 되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남북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면, 10.4선언은 인도주의, 경제, 문화, 군사,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업을 망라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10.4선언은 이행의 단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이행여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어 있다.

북한은 10.4선언의 전면이행을 한국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에 적용되었던 관행을 지속하고 대북포용정책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10.4선언의 전면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합의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만을 강조하는 반면,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6.15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인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이 자신들이 과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한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하여 남북한 간 기존에 합의된 모든 합의문을 존중하되 현실적 여건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행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관행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자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장관은 이러한 기본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대통령도 지난 7월 국회 개원 연설(7.11)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현실적 방도를 찾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10.4선언을 전면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10.4선언에는 이산가족 상봉, 보건의료협력, 환경기상협력 등 비교적 용이하게 단기간에 이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개성공단사업도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은 군사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협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종전선언문제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회담이나 남북한의 법·제도적 정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업은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10.4선언의 전체 40개 합의사항 가운데 철도·도로의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경협사업은 약 16개이다. 이러한 경협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10조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경협사업은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자원조달방법 등에 입각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10.4선언은 남북협력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10.4선언의 무조건적 전면이행을 주장하기 보다는 남

북한 당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허심탄회하게 실천가능 한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식량지원,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한의 현안과 함께 10.4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북핵문제, 미대통령선거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그것이 권력구조의 불투명성과 식량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